

# 글로벌 소식광장

## Global Goings~on

주요국의 보건복지 정책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최근 연구 자료를 선정하여 번역 정리한 글임.

### Minimum Wage Introduction and Employment: Evidence from South Korea

■ Economics Letters, Jisun Baek, WooRam Park, 139(2016), pp.18-21.

본 논문은 최저임금(minimum wage)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가 논쟁을 야기한다는 점에서부터 출발한다. 바꾸어 말하면, Card et al(1997), Neumark et al(2007), Schmitt(2013)와 같은 여러 선행연구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최저임금이 고용을 낮추는지에 대해서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는데,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인하여 본 논문은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실증분석을 수행할 때 최저임금을 지속 증가하는 것의 영향을 관찰한 반면, 최저임금 도입에 대한 영향을 보고자 하였다. 저자들은, 최저임금 도입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거

의 없으며, 대부분의 연구가 최저임금이 증가하는 경우의 영향에 초점을 두어 분석을 진행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더욱이 최저임금 도입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의 대부분은 최저임금이 최초로 국가적으로 제정, 도입된 영국(united kingdom)을 공간적 범위로 두고 있다는 점이다(Draca et al, 2011; Metcalf, 2008; Stewart, 2004). 이렇듯 기존연구가 최저임금을 증가시키는 경우에 국한되어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분석의 공간적 범위가 다양하지 못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한국(Korea)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저자들이 실증분석에 앞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최저임금제의 도입은 고임금 공장 근로자보다는 저임금 공장 근로자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사실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Difference in difference(이중차분법, 역자 주: 차이의 차이를 이용하여 처리효과가 존재하는지 분석하는 기법을 말함)와 공장(작업장) 수준의 패널 데

이터를 각각 분석방법론과 분석자료로서 적용하여 최저임금제가 새로이 도입되었을 경우 인과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1983년도부터 1990년까지의 광공업조사통계를 바탕으로 각년도, 각 산업의 공장 단위의 근로자들의 평균임금 회귀식을 적용한 분석결과를 간략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최저임금 도입은 저임금 공장 근로자의 평균 보수 증가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저임금 도입은 공장의 노동 비용(절감)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공장의 고용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방법론과 처리효과에 대한 접근 방식 등은 논문을 참고하면 된다.

**Direct evidence for income comparisons and subjective well-being across reference groups, Laszlo Goerke, Markus Pannenberg**  
 ■ Economics Letters, 2015(137), pp.95-101.

본 연구는 소득 비교(income comparisons)와 주관적 삶의 만족도(subjective well-being)간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저자들이 논문의 서두에서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상대소득이 주관적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실증 연구들은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서는 다음의 세 가지들 들 수 있는데, 첫째, 소득 비교가 개인들에게 얼마

나 중요한 것인지, 둘째, 사람들이 다른 준거집단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셋째, 자신들의 상대소득을 무엇으로 인식하는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들이다. 저자들은 이윽고, 연구자들의 경우 종종 자신들이 지적인 첫 번째 문제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가령, 준거집단을 연령과 같은 항목 등 관찰 가능한 기준으로 정의하고, 상대소득을 그러한 기준으로 발견한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문제들을 부분적으로라도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데이터는 거의 없다. Clark et al.(2010)은 (자신들의 연구에) 일반적인 소득 비교 정도를 적용하고, 비교의 방향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Clark et al.(2015)는 비교 정도와 가장 중요한 준거범주에 관해 인지된 제시된 준거집단의 인지된 소득에 관한 증거를 사용할 수 있는 유사한 정보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증분석을 위해 일곱 개의 준거집단에 대하여 자기 기록한 비교 정도와 인지된 상대소득을 바탕으로 한 독일 사회경제적 패널 데이터(German Socio-Economic Panel)를 분석 자료로 적용하였다.

분석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 비교 정도와 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부(-)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둘째, 소득 비교는 대부분 상위 집단을 향하고 있다. 셋째, 준거집단보다 덜 벌고 있다고 인지하는 것은 주관적 삶의 만족도와 부(-)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넷째, 비교 정도와 인지된 상대 소득은 상호 작용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독일의 경우, 사적 영역에서의 준거집단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원의 인지된 소득은, 준거집단

“친구”를 제외하면 주관적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통제변수를 포함시켜도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의 강건성(robustness)을 확보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저자들은 소득 비교 측정에 있어서 잠재적인 내생성 문제를 극복하지는 못했지만, 준거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고, 다른 영역으로부터의 소득 비교 측정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음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기타 분석 데이터 및 분석과정, 분석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논문을 참고하면 된다.

**Pregnancy intentions, maternal behaviors, and infant health: investigating relationships with new measures and propensity score analysis**

■ Kost, K., Lindberg, L. *Demography*, 52(1), pp.83-111.

의도하지 않은 출산은 어머니의 행동과 유아의 건강에 유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는, 공공보건정책과 출산 행동에 대한 많은 최근 연구들에 대하여 강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실증적인 증거들은 혼합된 결과를 보여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실증적인 증거들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U.S. National Survey of Family Growth로부터, 출산시기를 조절하지 못한 정도에 대한 정보

를 결합한 출산의도에 대한 측정치를 사용하였으며, 그리고 Santelli et al.(2009)이 개발한 desire scale을 사용하였다. 둘째, 출산의도에 따라 구분한 그룹들 내에서의 어머니의 특성들의 변량에 대해 살펴보았다. 셋째, 어머니의 배경적 특성과 어머니의 출산의도, 그리고 출산결과 간의 관계를 propensity score weighting을 통해서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propensity score weighting이 출산의도와 어머니의 행동, 그리고 출산결과와의 많은 관찰되는 관계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관계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제거하지는 않았다. 출산시기를 조절하지 못한 출산과 원하지 않은 출산은 여전히 의도한 출산보다 임신여부가 어머니에 의해서 더 늦게 인식되었다. 원하지 않은 출산은 초기 태아기의 돌봄과 모유수유를 더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desire scale의 수준에서의 출산과 비교하였을 때, 다른 모든 출산은 임신여부가 유의하게 더 늦게 발견되었으며 초기 태아기의 돌봄을 더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Unfair pay and health: the effects of perceived injustice of earnings on physical health**

■ Schunck, R., Sauer, C., Valet, P.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31(6), pp.655-666.

소득 불평등이 개인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는 반면, 소득 불평등과 건강 간의 상관관계 뒤의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겨우 부분적으로 이해되었다. 본 연구는 부당함(injustice)에 대한 개인의 인식에 기초하여 평가한 불평등이 이 관계 뒤의 원동력(driving force)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주요한 질문들을 다룬다: 개인의 근로소득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육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인식이 구조적인 건강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가? 제시된 가설은 노력-보상 불균형 모델에 기초한다. 이 모델에서는 부당함을 경험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며, 이것은 개인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한다. German Socio-Economic Panel 2005-2010로부터의 대규모 종적 자료에 대한 분석은, 자신의 근로소득이 부정당하게 낮다고 인식하는 여성이 유의하게 낮은 육체적 건강상태를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의 근로소득이 부당하게 낮다고 오랜 기간 동안 인식하는 경우 이러한 인식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육체적 건강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낮은 사회적 계층의 근로자, 특히 비숙련 블루칼라 근로자들이 더 많이 그들의 소득이 부당하게 낮다고 인식하였다. 부당한 근로소득의 경험은 사회적 계층과 육체적 건강 간의 관계를 제한된 정도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론은 부당한 근로소득에 대한 차별된 노출이 구조적 건강 불평등의 등장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 Earnings and first birth probability among Norwegian men and women 1995-2010

Rannveig Kaldager Hart, 2015. Demographic Research. 33(38). pp.1067-1104.

소득과 출산의 관계가 상황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는 인구통계학에서 핵심적인 연구 주제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득과 첫째 출산 확률(first birth probability)의 관계가 남녀 모두에게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는 것이다.

가정 내 성별 역할 분담의 약한 제도적 지원은 출산과 고용 사이의 충돌로서 여성의 소득과 출산 사이의 부정적 관계를 이끈다는 것이 알려져 있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가족 내 제도적 지원의 증가나 평등한 역할 분담은 여성 소득과 출산과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연구되었다(Anderson et al 2014, Berninger 2013, Matysiak 2011). 본 연구가 차별되는 점은 기존에 마이크로 수준에서의 소득과 출산률을 설명하는 데이터 분석은 없었고, 남성의 소득과 첫째 출산 간의 관계를 밝히는 시도가 없었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기간은 육아와 유급 노동(paid-work)의 노력이 남녀가 점점 유사해지는 구간으로 정하였다. 분석을 위해 노르웨이 인구 데이터에 이산시간 위험 회귀모형(discrete-time hazard regression model)을 적용하였다.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다른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기간을 엄마들이 유급 노동이 증가하고, 아빠들이 자녀양육이 증가한 기간이

라고 보고 있다. 분석 대상이 되는 기간 내에서 매해 소득과 첫째 출산 확률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분석하기 위해 다른 변인들(입학, 학위 취득, 출생지 등)을 통제하였다.

연구결과는 매해 소득과 첫째 출산 확률의 양의 상관관계는 해당 기간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강한 관계를 갖는다고 밝혔다. 국가 간 비교로부터 여성의 경우는 가정 내 엄마로서의 역할과 직장이 조화 가능한 경우에 보다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록 아버지의 아이돌봄의 잠재적 기회비용이 증가하지만, 남성이 소득과 첫째 출산 확률에 약한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증거는 없었다. 엄마로서의 기회비용 감소와 출산의 전략적 시기는 여성에게 있어 소득과 첫째 출산 확률이 점점 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게 되는 것은 타당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 Public Expenditure Projections for Health and Long-Term Care for China Until 2030

■ Luca Lorenzoni, David Morgan, Yuki Murakami, Chris James. 2015. OECD Health Working Papers, No. 84, OECD Publishing, Paris.

최근 중국은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을 달성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전례 없는 확장을 보이고 있다. 공공 또는 사업자 위주의 보험 제도를 통해 2005년 당시 중국 인구의 50%에도 못 미치던 비율이 2011년에는 95%가 보장을 받는 수

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보건 재정 구조는 크게 이동하였고, 이런 상황에서 공공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중기적 관점에서 보건 지출을 전망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OECD에서 개발한 구성요소 기반의 보건 지출 모형을 사용하여 보건의료(health) 및 장기요양(long-term care) 지출의 미래 전망을 OECD 국가와 중국을 포함한 주요 신흥국에 적용하였다. 여기서 구성요소는 보건의료와 장기요양을 말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보건 지출 전망을 위해 인구학적 효과(인구통계)와 비인구학적 효과(수입(income), 기술)를 고려하였다.

중국의 보건의료 및 장기요양 지출의 전망 결과를 살펴보면 2012년 GDP의 3.0%에서 2030년 GDP의 4.7% 또는 5.2%까지(다른 시나리오(cost-containment와 cost-pressure) 적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결과를 백분율 증가로 보면 중국의 보건 지출은 55% 또는 72%로 큰 증가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 중국의 급격한 고령화를 고려하더라도 OECD 국가의 평균인 29% 또는 40%, 주요 신흥국의 평균인 46% 또는 63%를 보인 것과 비교하면 큰 증가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높은 증가를 보이지만 모든 나라에서 보건의료와 장기요양 지출에서의 기술과 상대적 가격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위와 같은 전망 결과는 중국에게 건강보장 범위의 깊이와 질을 보다 개선하면서 비용관리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정책적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말하며 결론을 맺고 있다.